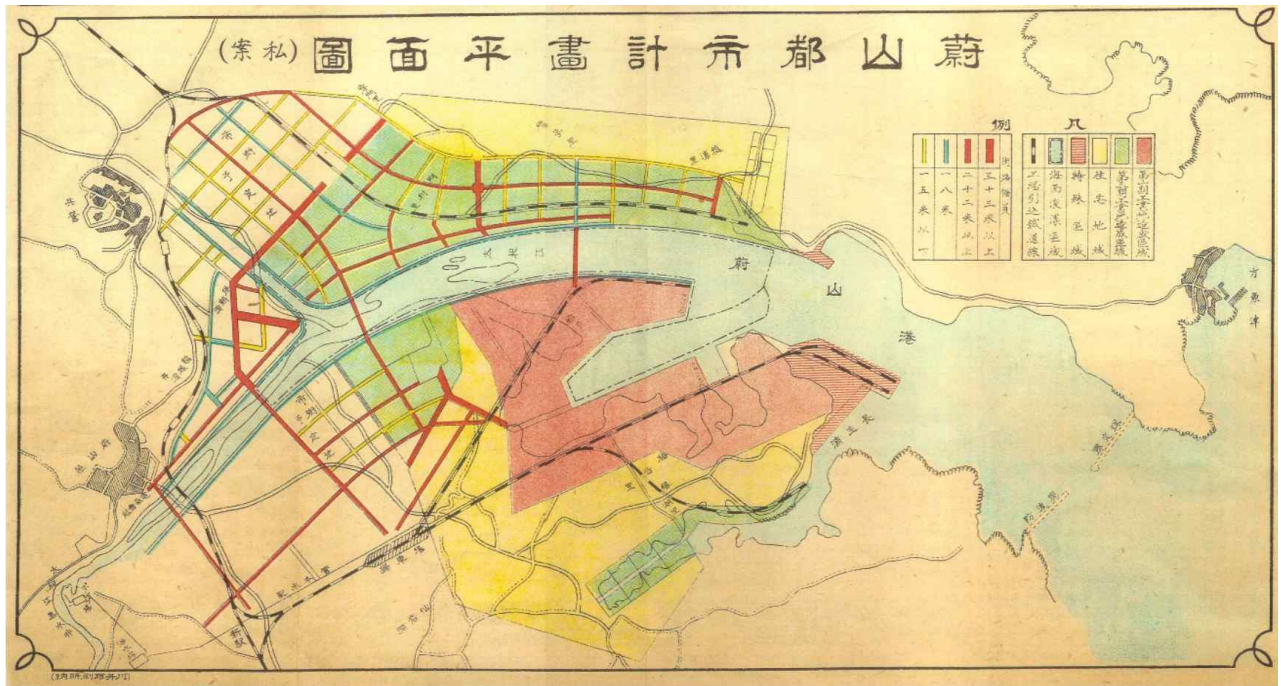


3·1운동 100주년
울산 원도심 근현대 역사를 걷다



길잡이 : 울산노동역사관1987

원도심의 변화는 해방 후 1960년대 울산에 최초의 국가공업단지가 들어서고 태화강 남쪽이 개발되면서 맞게 된다. 1962년 2월 3일 ‘울산특정공업지구’가 기공식이 열린 뒤부터 울산개발계획이 본격화 됐다.



▲ 1940년대 울산도시계획평면도, 1945년 광복으로 일제의 개발계획은 무산됐지만 1960년에 부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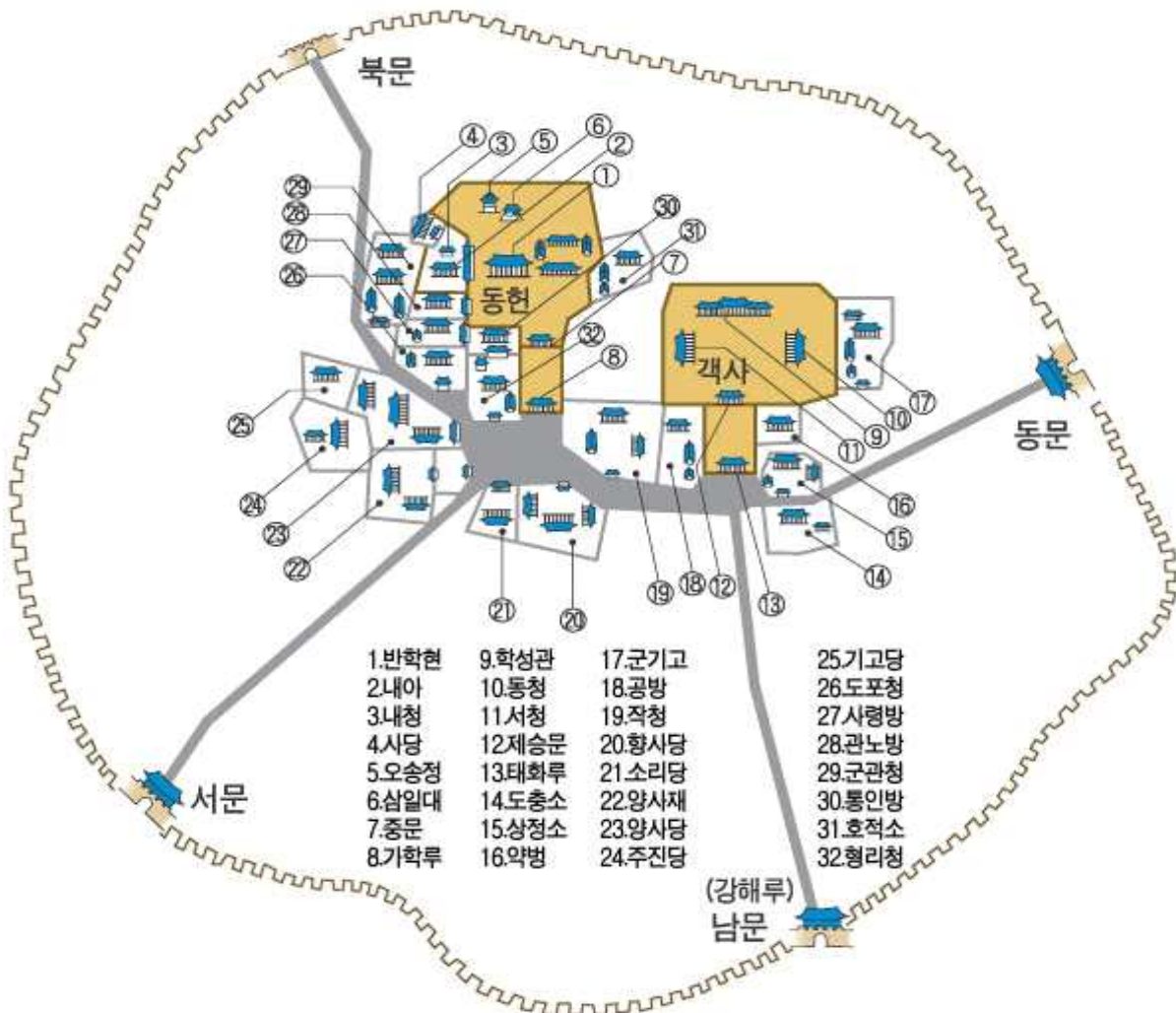
태화강을 끼고 북쪽과 남쪽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됐는데 1966년 태화교 준공을 시작으로 명춘교(1970), 변영교(1990), 학성교(1994), 신삼호교(1997)로 이어진다. 그리고 원도심에 있던 울산시청(현 중앙동행정복지센터)이 1970년 1월부터 현재 신정동으로 옮겨갔고, 뒤를 이어 행정기관이 하나 둘 원도심에서 떠나게 됐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울산시의 인구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데 대부분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였다. 1974년은 한 해 동안 25.2%나 인구가 늘었는데 그 숫자가 4만7,009명이다. 이 때 23만 3,916명을 기록했다.²⁾ 그리고 20년 뒤인 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했고 1997년 울산광역시로 바뀌었으며 인구도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런 도시 성장 과정에서 원도심은 정체되거나 미비한 변화로 그쳤다. 1980년대까지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도시구조가 이원화될 때 성장이 더뎠다. 결정적으로 1987년부터 시작된 달동과 삼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1998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도시의 변화는 원도심을 벗어나 태화강 남쪽의 신도심으로 집중됐다. 더구나 1992년 60년 가까이 유지됐던 학성동 울산역 이전과 1999년 8월 우정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거치게 되자 원도심은 더 힘을 잃게 됐다.

하지만 2010년을 거쳐 지난 10년 사이 ‘원도심 살리기’란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집중 됐다. 특히 문화와 특성화거리를 내세워 일정한 성과를 얻은 상태지만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2) 한삼건, 『울산의 기억 울산의 미래』 남구청, 2016

■ 울산읍성의 흥망성쇠



울산읍성은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기록대로 1477년(성종 8년)에 축조됐다. 현재의 중구 북정동, 옥교동, 성남동, 교동 일대를 포함해 북쪽에 야트막한 산을 낀 평지읍성이었다. 조선시대 읍성 대부분이 둘러싸는 성곽이 지형에 따라 불규칙한 모습을 지녔듯 울산읍성도 반듯한 형태로 정형화 된 형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울산 읍성 안에는 군관청과 도포청을 두어 치안을 유지했지만 별도의 군사 방어시설을 두지 않았다. 이는 경상좌병영이 위치한 병영성이 인근에 있어 군사보다 행정중심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읍성의 내부 시설은 조선시대에 대부분 구성한 읍성의 틀을 따라 만들어졌다. 가장 중심부에는 객사와 동헌이 들어서 있다. 그 주변으로 여러 용도의 관청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 백성들의 집이 들어섰다.

객사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나 궐패(闕牌)를 모시고 한달에 두 번씩 수령(守令)이 절을 올렸다. 수령의 집무소였던 동헌은 행정의 중심지다. 대개 객사와 관아가 있는 행정시설지역과 백성들이 사는 주거지역 사이에는 읍성을 관통하는 동서방향의 큰 길이 경계를 이루는데 이 길이 현재의 장춘로다. 길의 중앙에서는 남문(南門)으로 향하는 대로가 정비되는 T자형으로 구성

된 길이 읍성 내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었다. 이길에 시장이 형성되는데 울산읍의 장날은 5일과 10일에 열렸다.

울산읍성의 성곽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울산 왜성(도산성)을 축조하면서 성벽을 허물어 가져가면서 사라졌다. 병영성은 영조 이전에 복원됐지만 울산읍성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어 전체 규모를 추정할 뿐이다.

둘레가 약 1.7km인 울산읍성 안에는 30여개의 관청과 8곳의 우물, 4대문 그리고 동서남북을 가르는 도로가 있었다. 4대문 가운데 동문은 지금의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서문은 지금의 양사초등학교와 목살골목 사이에, 남문은 시계탑 사거리 아래쪽, 북문은 지금의 울산경찰청광역수사대 일대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성문 이름이 알려진 것은 울산읍성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 강해루(江海樓) 뿐이다.

울산객사 학성관의 변화

울산읍성에서 중심 객사(客舍)는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곳으로 고을 수령이 집무를 보고 머무는 동헌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름은 '학성관(鶴城館)'이라 불렀다. 임진왜란 때 소실 학성관은 1667년(현종 8년) 부사 류지립이 중건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객사는 동헌과 함께 1894년 갑오개혁, 1895년 을미개혁을 거치며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본래의 기능이 사라졌다.



울산객사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근대식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905년 을사늑약을 거치며 국권을 잃어가던 중 1907년 4월 울산공립보통학교 건물로 사용됐다. 처음엔 학성관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뒤편에 서양식 건물을 새로 지었고 이후 1934년에 건물 노후화와 운동장 확장을 이유로 학성관은 그대로 허물어졌다.



객사의 정문인 남문은 ‘태화루(太和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학교 도서관으로 사용되다 1934년 학성관과 함께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학성이씨 월진파가 나서 매입했는데 신정동으로 옮겨가 문중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사용했다. 그 건물이 바로 이휴정(二休亭)인데 2003년 9월에 원인 모를 화재가 나 모두 타버리는 사고를 겪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2005년에 5월에 복원한 것으로 2007년 11월에 단청작업까지 모두 끝내 원래 모습을 찾게 됐다.

해방 후에도 태화국민학교와 울산국민학교, 울산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꿔 운영했던 학교가 혁신 도시로 이전한 뒤엔 울산미술관 부지로 정해지면서 건물이 모두 헐렸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발굴 중 객사 유구가 나와 보존방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방치됐다. 현재는 울산미술관 신축 부지는 이웃했던 북정공원과 중부도서관을 허문자리에 짓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아래 사진처럼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는데 35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화나무³⁾만 그 변화를 견뎌왔다.



3) 이동고 사진 「구 울산초등학교 랜드마크는 300년생 회화나무」, 『울산저널』 2018.9.5

객사 터는 현재 아래 자료⁴⁾처럼 현지보존 상태지만 이후 울산미술관과 연계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 미지수다. 시민들의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한 공간이다.

② 객사유구터 현황 - 현재, 구 울산초등학교 객사유구는 ① 현지보존 조치 상태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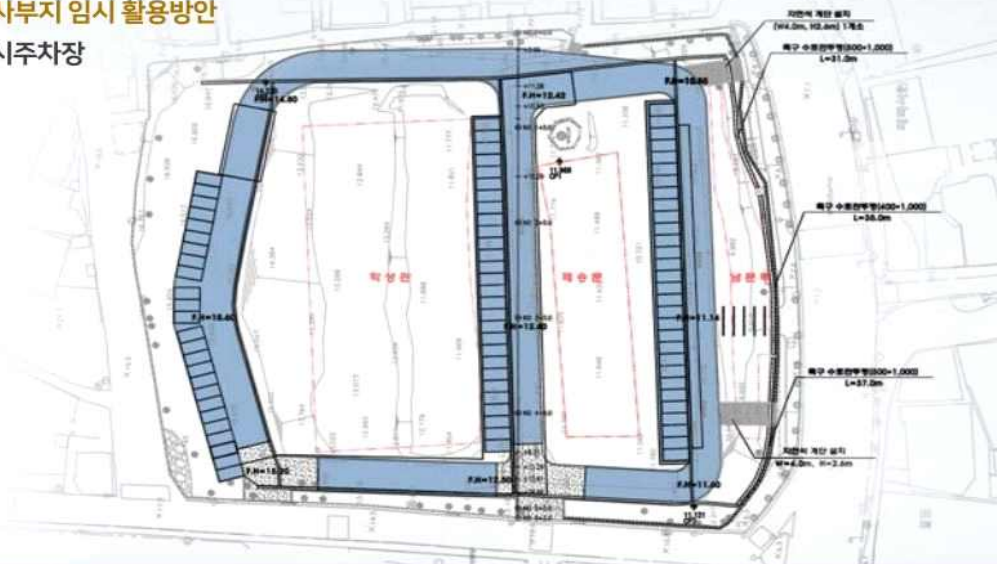


※ 문화재 발굴 시 유구에 대한 조치 방법 (매장문화재법 제14조)

- ① **현지보존**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 ② **이전보존**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 ▶ 울산 KTX 역사 광장부지 내 유적을 이전하여 복원 (2010. 문화재청)
- ③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기록보존하고 원래 목적대로 사업시행하려는 가결로 사업진행)
 -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부지 발굴결과와 유구가 훼손되어 기록보존 후 사업시행
 - ▶ 종친부 유구는 보존하여 건물을 이전, 복원하도록 결정 (2011. 3. 18. 문화재청)

03 객사부지 활용

② 객사부지 임시 활용방안
임시주차장



② 권고안

미술관 등과 연계한 객사부지의 영구활용방안을 '19년도 중 확정하고, 영구활용방안 시행 이전에는 유구 표시, 조정 등을 시행하여 미술관 연계 행사장으로 활용

4) 울산광역시, 「시립미술관 건립 공론화 시민토론회 자료집」 2018.8.29

울산동헌 - 학성도호부



객사가 그 고을에서 형식적으로 으뜸이 되는 곳이라면,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은 지방 수령이 행정사무를 보는 동헌이었다. 울산지방은 조선 전기까지 ‘군(郡)’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이 지역 의병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1599년(선조 32)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임진왜란 불탄 것을 다시 동헌을 복원한 때는 1681년(숙종 7년)으로 당시 울산부사가 김수오였다. 그의 아들 김호가 1695년(숙종 21년)에 부사로 부임해 ‘일학헌(一鶴軒)’이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지금 동헌 대청마루에는 ‘반학헌(伴鶴軒)’ 현판이 걸려있다. 1760년(영조 36년)에 당시 부사였던 홍익대가 동헌 건물을 중창하면서 걸었던 것을 참고한 것이다. 모두 송나라 고사와 울산 학(鶴)전설을 따온 이름이다. 한 마리의 학, 학과 짝을 이룬다는 것은 모두 청렴과 강직을 담은 문구다.

동헌 입구에는 가학루(駕鶴樓)가 있었고 뒤편에는 오송정(五松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동헌 남쪽으로는 이 지방 양반들이 기거하던 향사당(鄉士堂), 서쪽에는 교육을 담당하던 양사재(養士齋 현재 양사초등학교), 군사업무를 맡았던 군관청(軍官廳), 오늘날 경찰서인 토포청(討捕廳) 등이 있었다.

동헌건물은 일제강점기에 헐리게 된다. 초기엔 울산군청의 회의실로 쓰다가 1930년대에 완전히 헐려 새로운 신축 건물로 바뀌었다. 해방 후에도 관공서로 사용됐는데 1962년 울산이 시로 승격할 때 울주군이 갈라질 때 울주군청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1979년 옛 울주군청사로 옮겨 가기 전까지 유지됐다.

지금 복원된 동헌 건물은 1981년에 만든 것이다.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축소된 모습으로

동헌, 내아, 오송정과 동헌 정문을 복원했다. 하지만 정문은 과거 ‘가학루’ 사진이 발견돼 다시 2017년에 새로 바꾸었다. 처음 복원한 문은 단층으로 다음 사진⁵⁾처럼 ‘학성도호부(鶴城都護府)위문’라는 현판이 걸었는데 고증이 잘못된 것이었다. 결국 세금을 낭비한 셈이지만 바꾼 모습이 확실히 나아 보인다.



5)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 류병은, 「울산동헌 및 내아」 2013.1.9

조선후기 동헌으로 백성들이 몰려간 울산민란

1862년에 벌어진 임술민란은 경상좌병영 좌병사 정주옹이 기존 환곡⁶⁾에다 새롭게 완향곡을 더한 것에서 비롯됐다. 백성들은 갑자기 커진 조세 부담에 거둬 항변을 했지만 좌병사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백성들이 직접 항의하러 가는 길에 그동안 행실이 나빴던 서리의 집 8채를 부수고 병영까지 다다랐다. 하지만 좌병사는 문을 닫고 총과 창으로 백성들을 진압하니 2명이 총에 또 다른 2명은 창에 찔려 죽었다. 체포돼 형벌로 죽은 자까지 합치면 모두 9명인데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힐 뻔 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의 보고로 내막이 드러나 좌병사와 울산부사가 처벌을 받기에 이른다.

그런데 8년 뒤 1875년(고종 12년)에 또 다시 울산에 민란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울산 동헌으로 백성들이 쳐들어갔다. 규모도 이전보다 훨씬 컸다. 사건은 이방 김양서가 공금 1만 5,800냥을 유용했다가 이를 메우려고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5,000냥을 부담시킨 것이다. 그때 남창과 동천에 두 차례 모여 집회를 열고, 당시 부사였던 정기대에게 원통함을 호소할 대표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정기대는 비리 아전을 감싸고돌았고 급기야 김양서를 몰래 도망시켰다. 그 결과 부사가 아전과 함께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았고 백성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백성들이 울산 관아로 쳐들어간 것은 4월 15일. 수천 명의 농민들이 동헌에 들어가 울산부사 정기대를 끌어냈다. 이날의 함성을 보면 그 분노가 어떠 했는지 알 수 있다. “부사 정기대를 울산 밖으로 추방하자!” “공금 땡가먹은(가로채) 김양서를 찾아라!” “아침에 빌려주고 저녁에 받으면서 이자 받은 김준일을 불태워 죽이자!”⁷⁾ 감옥을 파괴해 억울하게 끌려간 죄수들을 석방하고, 재물과 세금명부도 모두 찾아냈다. 이때 부패한 아전의 집 등 50여 호도 함께 파괴됐다고 한다.

민란은 좌병영의 군사들이 출동해 설득한 뒤에 해산했지만 후에 처벌은 가혹했다. 조정에서 안동부사 홍철주를 안핵사로 파견해 난을 수습했는데, 원흉 김양서 뿐 아니라 민란을 주도했던 박남표와 김연암, 치충감 등을 효수했고 민란 참여자 다수를 처벌했다. 그리고 부사 정기대 뿐 아니라 그 앞전의 이희성도 의금부에서 죄를 물었으니 구조적인 비리가 계속됐음을 짐작케 한다.



6) 흉년 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고 풍년·추수기에 되받는 진휼제도

7) [김진곤의 향토사 칼럼] 조선 고종 12년(1875)에 일어났던 울산민란, 『울산저널』 2015.08.27

■ 일제강점기 원도심



▲ 1930년대 초반 울산원도심 항공지도, 장터걸에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보면 장날로 추정된다.

1905년 러일전쟁승리와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경술국치까지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되는 동안 일제는 울산 원도심을 빠르게 일제 통치 근거지로 변화시켰다. 그 과정에 식민통치를 위한 관공서과 행정기관이 차례로 들어섰다. 1907년 객사에 울산공립보통학교를, 같은 해 양사재 자리에 울산심상소학교를 개교했다. 그리고 1908년 울산경찰서를 도호부의 이방이 사용하던 작청자리에 설치했다. 울산군청은 1915년에 동헌 자리에 회의실, 숙직실, 소사실, 창고 등의 건물을 신축했고, 울산면사무소는 객사 건너 도총소(현재 옥교공영주차장)에 들어선다. 이후 1931년 울산읍으로 승격된 후에 신축된 읍사무소가 1933년 현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세워지면서 기능이 이전된다.

원도심 인구변화와 행정구역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1916년		10,494	540	12	11,046
1930년	남	6,992	406	44	7,442
	여	7,071	383	7	7,461
	합계	14,063	789	51	14,903
1935년	남	7,495	505	27	8,027
	여	7,666	416	2	8,084
	합계	15,161	921	29	16,111

울산원도심을 아우르는 울산면(읍)의 인구변화는 앞의 표⁸⁾와 같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와 국세조사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20년 사이에 인구가 50%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인의 비중은 크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05년 이후 일본인이 대거 이주해 어업수탈공간으로 삼았던 방어진을 포함한 동면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일제시기 울산면과 동면 인구 증감 (단위:명)

명 면	1909		1916		1919		1930		1935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울산	11,076	257	10,494	540	10,798	425	14,063	789	15,161	921
동	4,298	613	6,379	1,305	6,809	2,411	11,592	1,674	12,066	1,635

타 지역의 인구 변화와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해진다.

1920-1930년 부 지역 한국인과 일본인 인구 성장⁹⁾(단위: 명, %)

	한국인			일본인		
	1920년	1930년	인구증가율	1920년	1930년	인구증가율
군산	8,243	16,894	104.95	5,659	8,707	53.86
목포	11,270	26,335	133.67	5,273	7,922	50.24
대구	32,451	73,060	125.14	11,942	19,426	62.67
부산	40,532	97,558	140.69	33,085	47,761	44.36
마산	11,923	22,189	86.10	4,172	5,587	33.92

※1920년 자료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0년 자료는 ‘국세조사’임

위의 표는 일제강점기 부¹⁰⁾ 지역 중 인근의 대구, 부산을 비교하면 울산의 인구 증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큰 도시에 해당하는 부의 경우 농촌지역의 인구 이동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울산과 단순비교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산, 목포, 마산부는 울산면과 동면만 합쳐서 따져 봐도 인구 규모에선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었다.

울산은 행정구역은 원래 1896년 십삼도제(十三道制, 13도제)로 조선의 마지막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 질 때 3등군으로 분류 됐다. 그러다 1914년 부군면 통폐합¹¹⁾ 때 4등군 언양군과 합쳐져 울산군이 된 것이다. 울산면은 1931년에 읍으로 승격했고 1937년에 방어진도 읍으로 승격했다.

8) 정현준 「일제강점기 울산 구도심의 도시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울산대석사논문, 2005

9) 이정섭 「일제 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1930년 부(府)와 지정면(指定面)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2권 제1호, 116p 중 일부 인용, 2017

10) 부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시에 해당한다.

1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울산장과 공익시장(상설시장)



조선시대 울산부장(府場)은 상부면(上府面), 즉 울산읍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울산장(蔚山場)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객사 남쪽길(주작대로, 장터걸)을 따라 5일과 10일을 지켜 빠짐없이 열렸다.

위의 사진은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아 1920년대 후반 또는 1930년 초반으로, 주작대로에 열린 울산장날 모습이다. 원래 초가집이 들어서 있던 거리 주변이 대부분 일본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 일식건물이 들어섰다¹²⁾. 장이 열리는 건물 앞에 노점이 깔리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이들이 나와 물건을 사고팔며 하루를 즐겼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1920년대 울산읍내장의 거래액 내역을 보면 농산물 69,286엔(18.98%), 수산물 61,216엔(16.77%), 직물 36,738엔(10.07%), 축산물 141,639엔(38.81%), 기타 56,121엔(15.38%)이었다. 교역 물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과 가장 중요한 교역품목이 소와 같은 축산물이었다고 한다.¹³⁾ 다른 장시들과 비교할 때 수산물 비중이 평균의 2배 이상 높고 축산물도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울산장 인근(성남동 190번지 일원)에 큰 우시장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¹⁴⁾

울산장은 1927년 경 울산군청이 나서 교통과 위생 문제를 들어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시도가 생긴다. 읍민들이 반대하자 어시장만을 따로 상설화하는데 그 위치가 현재의 중앙시장이다. 그리고 1933년에 수산물과 채소류를 함께 취급하는 공설일용품시장을 1933년 12월 10일에 개장한

12) 김현규, 한삼건 「일제시대 울산읍성의 공간구조 변화 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13) 허영란, 「근현대 울산지역 장시 변동과 지역질서의 재편」 『역사와 경계』 81, 2011.12

14) 조성민 『울산의 장터, 어제와 오늘』 『울산학교양서총서 3』, 2010

다. 이후 어류와 일용품은 상설로 팔고 다른 물품은 종전처럼 5일장에서 취급하는 아래 신문 사진¹⁵⁾처럼 이중 구조로 형성된다. 그러다 1935년 학성동 울산역이 신축돼 기존 성남동 울산역이 철거되면서 시장 이전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왔다. 서부 쪽을 대표하는 울산읍회 의원 김성진¹⁶⁾이 앞장서 성남동 울산역 위쪽 현재의 성남프라자에 있던 옛 연지(연제)를 매워 1937년부터 5일장부터 먼저 옮겨 열게 했다. 이후 양 시장의 통합을 두고 동쪽과 서쪽을 기반을 둔 유지들끼리 심한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특히 동부 쪽 읍의원 김활천¹⁷⁾은 서부로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



雜踏する蔚山邑：
 (上)本町通り (下)公益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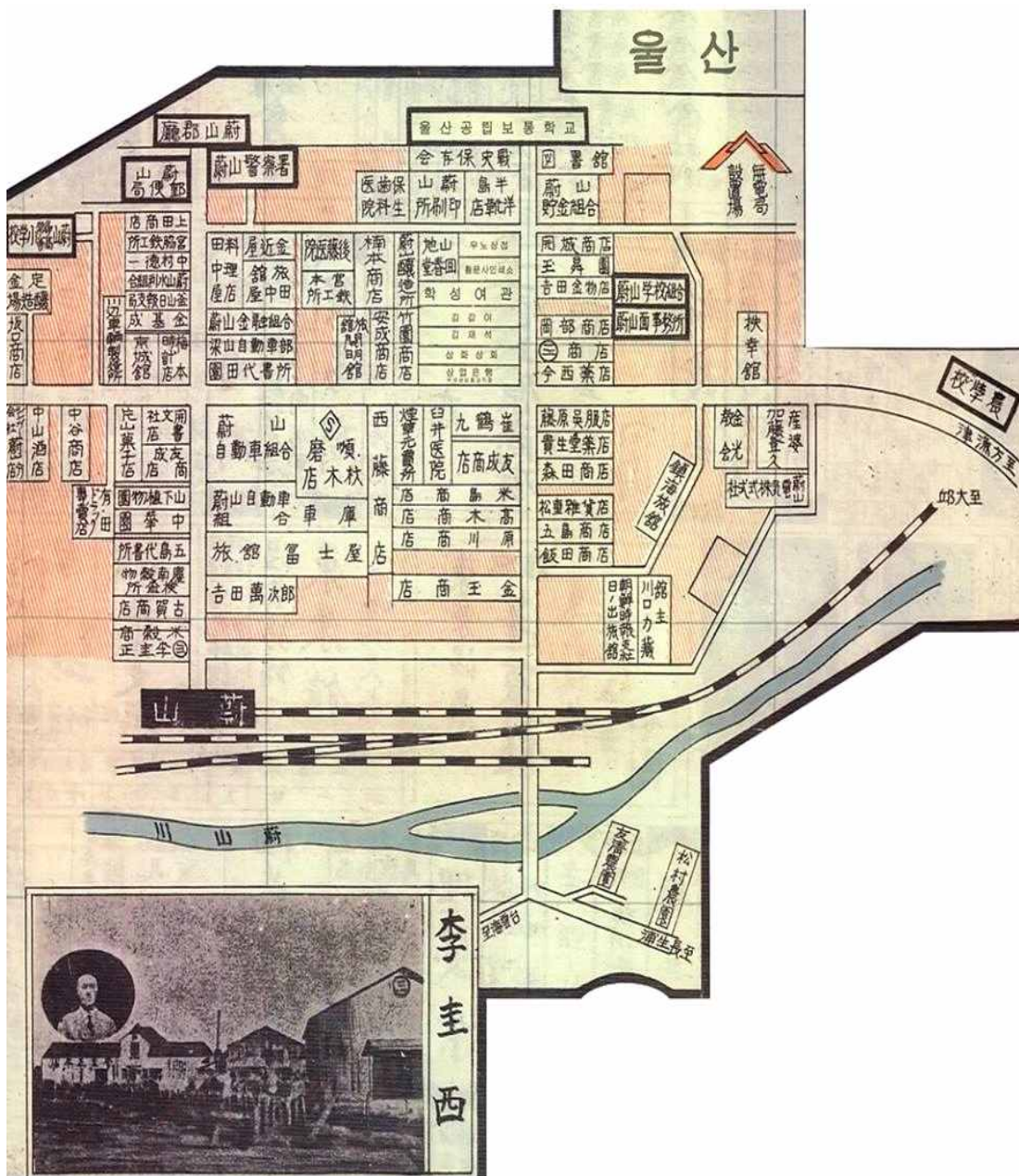
15) 『부산일보』 울산읍 본정통과 공익시장 1939.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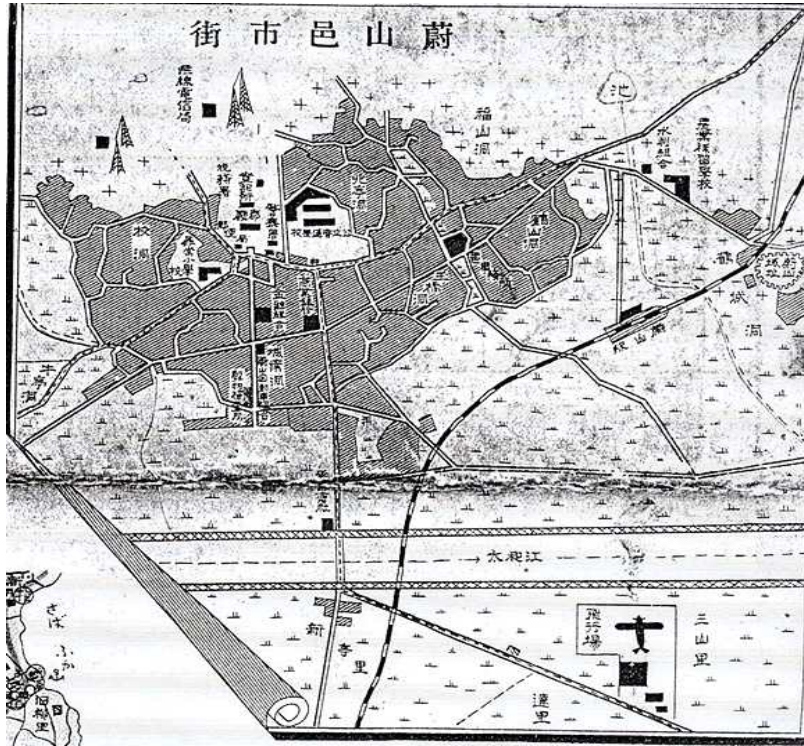
16)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의 인물』 2014

17)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의 인물』 2014 “울산에 신간회가 조직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8년 3월 창립대회 때 간사로 선인되었다. 울산에 산재해 있는 청년단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노력을 했다. 울산노조를 만들어 조합장으로 활동했다.”

도로 항공 철도와 함께 변화한 원도심

아래 지도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도에 만들어진 「대일본직업별명세도」 속 울산 원도심이다. 북쪽에 있는 울산군청과 울산공립보통학교를 시작으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 양편을 일제 관공서와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원도심이 일제에 장악된 모습을 보여준다. 지도 중앙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옛 국도7호선이다. 지금은 북부순환도로 바뀌었지만 일제강점기 국도7호선을 통해 부산에서 울산의 원도심을 통과해 경주를 거쳐 동해안 위쪽 고성까지 이르는 도로였다. 아래쪽의 철도는 대구에서 출발해 경주를 거쳐 울산까지 이어지는 조선중앙철도 중앙선이다. 동시 왕복이 불가능한 협궤열차였다. 역은 현재 성남동KT건물로 1935년 학성동 울산역이 만들어지면서 철거된다.





위의 지도는 1935년 이후의 울산 읍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울산 원도심에 있던 울산역이 학성동으로 이전한 모습이다. 이 철도는 동해남부선으로 남쪽으로는 남창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졌고 북으로는 경주, 포항을 지나 동해를 따라 원산까지 올라갔다. 철도가 부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태화강위에 철교도 놓여졌다.

태화강 남쪽에 있는 비행장은 1928년에 개장한 최초의 국제공항이다. 원래 여의도 비행장과 동시 개장한다는 계획으로 신축됐는데 앞장서 문을 열었다. 삼산에 6만평 규모로 6인승, 12인승 경비행기가 취항했다. 이 비행장과 연결하는 다리가 울산교다. 1935년 8월에 개통됐는데 1990년 변영교가 생길 때까지 제 몫을 다하게 된다. 아래 지도¹⁸⁾의 1번은 학산로, 2번이 학성로다. 원도심과 학성동울산역을 잇는 도로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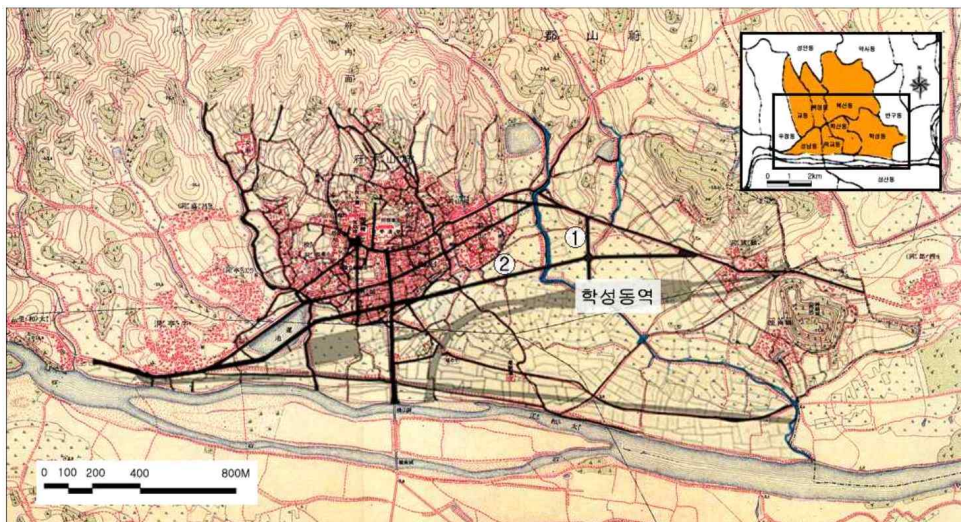


그림 5. 후기(1931년-1945년)의 간선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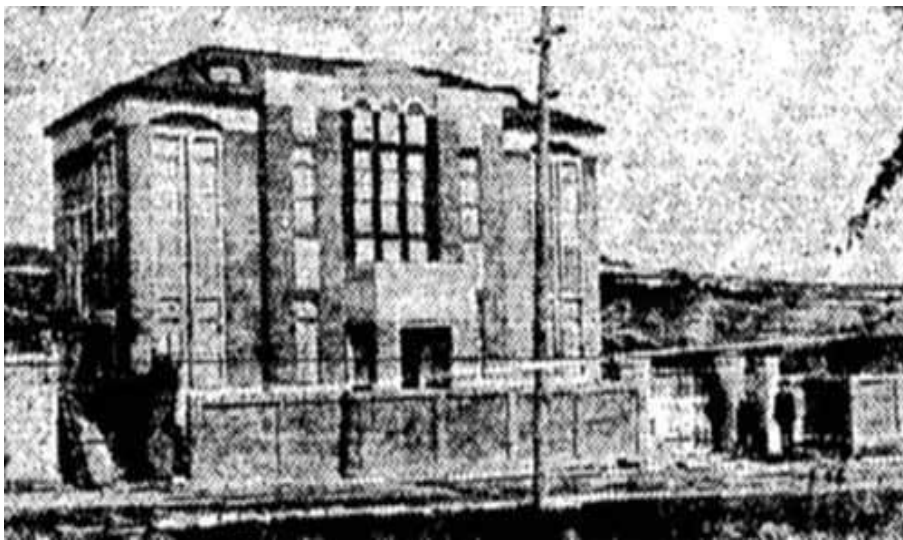
18) 김성순, 한삼건 「일제강점기 울산읍의 도시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8.5

■ 그 외 원도심 근대 공간



1910년대 울산우편국

울산우편국은 1898년 동래우체사관할 울산임시우체사로 개국해 1905년 울산임시우편소로 바뀌었다. 울산우편국으로 승격한 것은 1910년이다. 1928년 기준으로 일본인들은 1천 명당 전화 보급이 56대지만 조선인들은 1.5대에 불과했다고 한다.¹⁹⁾ 따라서 짠 금액으로 멀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편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1933년 울산읍사무소

1933년 1월에 신축된 울산읍사무소는 위 사진처럼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2층이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더 지난 1934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해 모두 불타 새로 지어야만 했다. 해방 후에도 계속 남아 1962년 울산시 승격 때 울산시청으로 사용되다 1970년 시청이 신정동으로 옮긴 뒤 중구청, 옥교동사무소 등으로 활용되다 아예 허물고 지금의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들어섰다.

19) 울산광역시, 『울산근대를 걷다』 2015



1930년대 부산상업은행 사거리

위의 사진은 부산상업은행이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거리 모습입니다. 상업은행은 옛 국도 7호선이 장터길(본정통)과 맞닿는 곳에 세워졌는데, 현재 완공직전 부도가 난 대형건물 자리에 있었다. 사진에서 오른쪽 건물은 상업은행의 맞은편으로 서곡약방, 왼쪽 건물은 잡화가게인 오복점으로 현재 카페 숨 건물이 들어선 곳이다.



1940년대 초 울산신사

울산에 세워진 신사는 북정동 동헌 위쪽 일제강점기 울산군청 뒤편이다. 현재는 방통대 부속건물이 남아있는데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울산중부도서관이 신축될 예정이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거치며 조선인의 신사참배를 강제했는데 울산도 다르지 않았다. 위의 사진 속 제복을 입은 이들은 울산농고 학생으로 학생근로복구대로 함께와 참배하는 모습이다. 1940년대 초 강제징용과 징병이 한창일 때 고향을 떠나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됐다고 한다.

■ 울산공립보통학교 터앞에 세워진 표지판



지난 달 6월 10일 울산교육청은 울산초등학교가 있었던 옛 울산공립보통학교 터 앞에 QR코드 표지판을 세웠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울산교육 속 독립운동 역사 찾기에 나선 후 세 번째 발걸음이었다. 이번에는 1926년 울산에서 벌어진 6·10만세운동의 중심지를 기억하는 표지판이라 뜻 깊었다. 3·1은 알라도 6·10은 잘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울산과 6·10만세운동을 연결해 배우거나 들어본 적 없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에.

울산초등학교의 전신은 울산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였던 울산공립보통학교. 갑오개혁 이후 근대식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울산 읍내 개진학교가 첫 근대식학교로 개교했다. 근대식 교육에 대한 울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따라 개진학교는 울산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됐다.

개교 이후 학생 정원은 입학할 희망하는 지역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쳤다. 입학정원은 남녀 합쳐 120명인데 지망자는 무려 4배를 넘어섰다. 당연히 학급 수 증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1938년에 16학급, 1941년에 21학급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울산공립보통학교는 4년제로 개교한 뒤 1911년 2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후 6년제로 개편되었다. 조선총독부가 교육령을 연이어 개정하면서 1938년에 태화공립심상소학교로, 1941년 태화공립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울산이라는 이름을 일본인 학교인 울산심상소학교(현 양사초등학교)에 빼앗긴 것이다. 해방 후 1955년에 이르러 울산국민학교로 개칭하면서 ‘울산’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울산공립보통학교와 항일운동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4월 2일 언양, 4일과 5일에는 중구 병영, 8일에는 온양읍 남창에서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울산시위는 모두 장날에

시작되었다. 울산 읍내는 일제 경찰의 방해로 시장이 열리지 않아 만세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울산읍내 주민들과 학생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높았다. 3.1운동 당시 온산읍 당월리에 사는 울산공립보통학교 학생 김인석(13세)은 울산지역에서 벌어진 시위 소식을 듣고, 4월 15일 마을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여 집집마다 배포하며 만세시위를 독려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김인석은 20여일 만에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1926년 4월 순종이 사망하자 전국에서 추모행사가 거행되었다. 이 추모 흐름에 맞춰 7년만에 다시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펼쳐지는데 바로 6·10만세운동이다. 울산면민과 울산보통학교 학생들은 앞장서 봉도식(추모식)을 열었다. 상인들은 애도의 뜻으로 가게 문을 닫는 철시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5월 1일 울산공립보통학교에는 지역주민과 학생 2천여 명이 모여 봉도식을 치렀다. 울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봉도식을 마친 뒤 학교 측에 하루 휴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주일간 동맹휴학할 것을 결의하였다.

순종의 장례날인 6월 10일을 맞아 지역의 언론사들은 경찰의 방해를 무릅쓰고 장례식 참배단을 모집하여 상경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울산공립보통학교, 중구 병영의 학성공립보통학교, 북구 강동 정자강습소, 온양읍 남창 온양공립보통학교 등지에서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울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추모식 뒤 동맹휴학을 하였다. 동맹휴학은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울산공립보통학교는 근대 교육을 위한 공간이자 식민지 청년들의 의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장소였다. 울산읍내 한 가운데 위치하여 유학생 귀국강연회, 농산물박람회, 순회 연극공연, 민민체육대회 등 대중 강연이나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다. 이들 행사는 3.1운동 이후 조직되어 민족계몽과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활동한 청년단체와 소년단체 등이 주도한 것이었다. 울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들은 울산청년회, 울산소년회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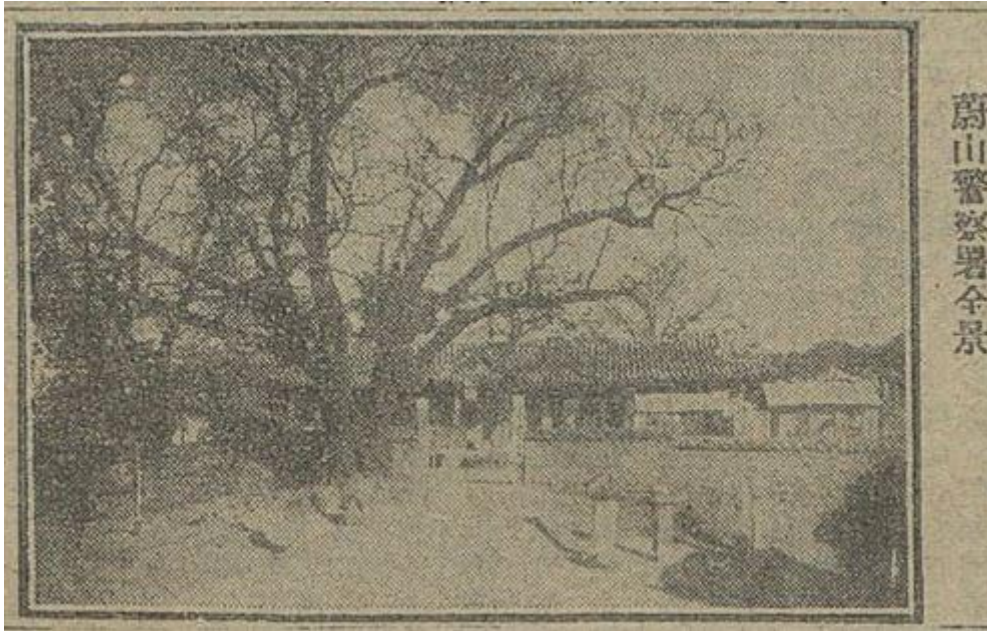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울산심상소학교

지금의 양사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읍내에 살던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다. 1907년에 개교했는데 이름을 조선인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와 구분해 '심상소학교'라고 붙였다. 일본인 학교인 심상소학교는 울산에 모두 6곳에 세워졌다. 일제강점기에 학창시절을 보냈던 이들의 기억 속에 양사학교를 지날 때마다 일본인 학생들과 시비가 붙거나 적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한다. 바로 옆에 울산공립보통학교가 있어 울산심상소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자존심이 대결이 벌어졌는데, 민족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더 그랬다고 한다.

심상소학교는 해방 직후 모두 폐교된 뒤 일부가 그대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아 다시 개교한 곳이 방어진국민학교와 양사초등학교, 장생포국민학교다. 양사국민학교는 일본인학교였다는 역사를 지우면서 울산이라는 이름대신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었던 양사재이름을 따라 학교명을 바꾼 것이다. 1946년에 10월 1일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일제강점기 울산경찰서, 그리고 법원울산지청

울산경찰서하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에게 치를 떨게 만드는 공간이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경찰서는 1907년인데 경찰서 본서와 순사주재소가 전국에 설치될 때 함께 만들어졌다. 기사에 1917년 당시 울산군에는 울산경찰서와 8개의 순사주재소가 있었다고 한다. 울산경찰서 장소는 동헌과 객사 사이에 있던 작청 자리다.



일제강점기 경찰서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고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장소였다. 의병과 교전²⁰⁾하고 체포하는 것도 경찰이었고 1919년 3·1만세운동 때 언양과 병영에서 총을 난사해 만세행렬을 죽임으로 내몬 것도 경찰이었다. 특히 4월 5일 병영 만세운동 2일째 울산경찰서에서 병영주재소로 울산경찰서장과 순사 8명이 지원 왔고 그들이 난사한 총에 4명의 순국자가 나왔다.²¹⁾ 또 만세운동 기간 연행된 이들은 울산경찰서에 수감돼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모진 고문을 겪어야 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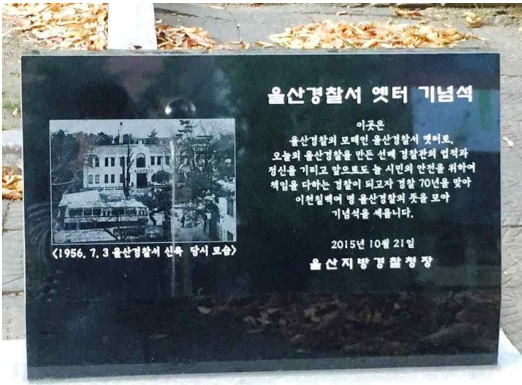
울산경찰서는 다른 지역보다 ‘순사양성소’²²⁾라는 말이 붙을 만큼 맹활약(?)을 펼쳤다. 일제강점기 가장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1899년 6월 1일 ~ 1968년 4월 1일)이 처음 경찰관을 지원한 곳이 울산경찰서다. 노덕술은 1920년에 순사로 임명됐는데 1922년 울산경찰서 순사부장이 됐다. 그리고 1924년 동경부 및 도경보고시에 합격해 경남 의경과 거창을 거쳐 동래경찰서 경부보로 자리를 옮겨 갔으니 출세가 매우 빨랐다. 그 뒤로도 일제강점기 말까지 친일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에 앞장섰고, 해방 후에도 미군정과 친일파를 등에 업은 이승만의 비호아래 땡땡거렸던 자다.

20) 『황성신문』 1908.5.19. ‘本月九日에 蔚山警察署巡查와 守備隊日兵이 該郡北方에서 義徒五十名과 交戰하얏다더라’

2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사』 「일제강점기」 662p

22) 『개벽』 제64호 「嶺南地方 巡廻片感」 “울산읍에 한 가지 所産이 있는데 그것은 巡查所産이라”

울산경찰서는 항일의 기미만 보여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926년 순종이 죽은 뒤 치러진 인산(장례)에 맞춰 울산보통학교 학생들과 원도심 상인들이 망곡과 철시를 할 때도 전전공공을 넘어 철통같이 감시를 했다. 급기야 경성으로 취재를 가는 신문기자의 가택을 수사하고 병영에서는 사복형사를 풀어 병영역을 오가는 사람들을 취조하고 수상하다 검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회단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울산경찰의 몫이었다. 1927년, 신간회울산지회 창립대회를 금지한 후 원천봉쇄했고 연이어 울산지역 청년단체가 하나로 뭉친 청년동맹 결성 집회도 금지시켰다. 나아가 창립준비위원장 강철을 비롯해 조형진, 권우락 등을 금지 직후 체포 검거했다. 그리고 1929년 울산노동야학연합회 창립 금지, 1930년 울산동면노동조합 창립을 시국상의 이유를 들어 금지하는 등 조선인의 결집을 사사건건 방해하였다.

울산경찰은 직접적인 탄압은 말할 것도 없다. 1928년 언양소년회불온문서사건, 1935년 방어진 적색비사사건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체포했고 연이어 서생·언양농조사건과 울산독서회사건으로 대규모 검거열풍을 올리며 실적 쌓기에 혈안이 됐다.

해방 후 울산군민들이 가장 먼저 파괴한 건물이 울산경찰서였다. 해방 다음날 군민들은 현재 성남동에 있는 울산소방서 앞에 모여 울산경찰서로 몰려가 경찰서를 습격했다. 그리고 울산동헌 뒤편에 있던 신사와 현재 중부도서관 가는 오르막길의 입구에 있던 도리이를 부셔서 무너뜨렸다.

옛 울산경찰서 자리에 1956년에 신축했다고 기념석을 세워놨었는데 정확하게는 일제강점기 경찰서가 파손된 자리를 개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울산미술관 공사장소로 변해 확인 할 수 없다. 그리고 울산경찰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 된 사람들이 구금된 장소로도 사용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간에도 시위대를 막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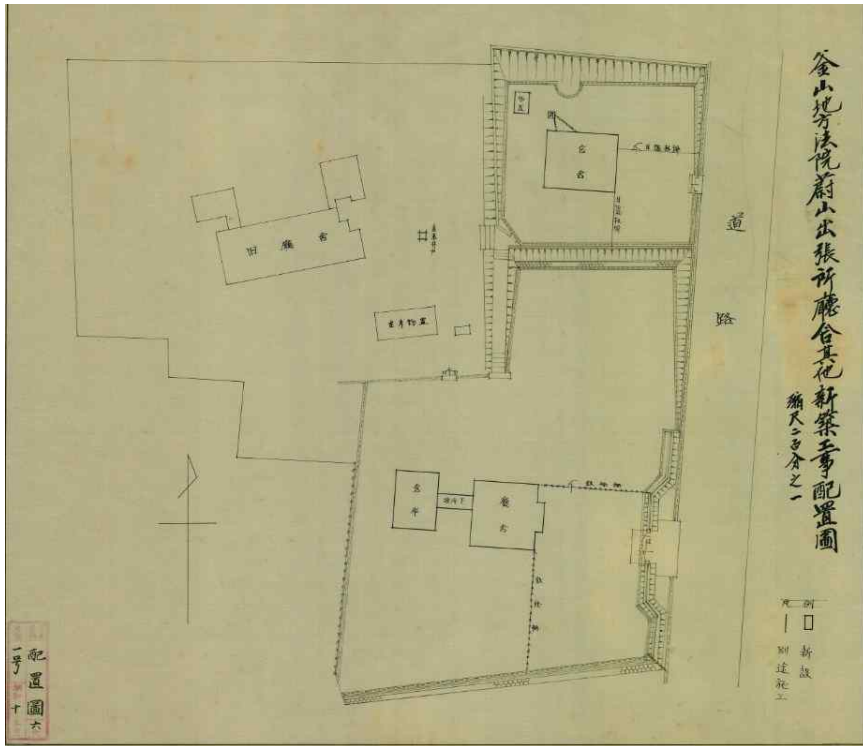
울산경찰서는 1994년 병영으로 이전하며 중부경찰서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경찰서가 있던 자리는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위층은 공원을 만들었다. 바로 성남동 중부도서관 앞에 있는 북정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울산미술관 공사현장으로 모두 사라졌다.

북정공원 한편에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항일운동을 펼치다 산화한 박상진의사의 추모비와 동상을 세웠던 것은 일제강점기 울산경찰서 자리에 대한 의미심장한 배치였다.



부산지방법원울산지청

일제강점기 북정동의 울산지청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고 재판했던 곳이다. 특히 3·1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이 울산지청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태형이 결정돼 모욕적인 처벌을 받은 곳이다.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청 1935년 신축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은 지금은 울산미술관 건립 터로 철거된 예전 중부도서관 자리에 위치했다. 울산에 만들어진 근대 첫 사법기관이자 등기소가 들어섰다. 때는 1909년 2월로 진주지방재판소 산하 울산구재판소로 설치됐다 같은 해 11월에 부산지방재판소 산하로 소속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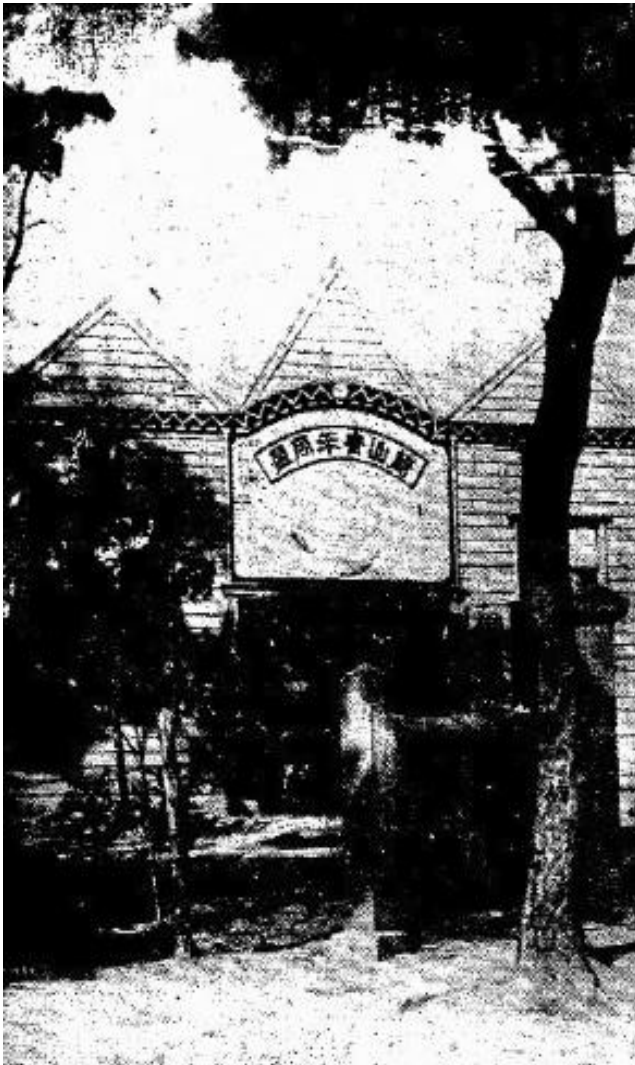
1912년 조선총독부가 사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재판소를 법원으로 바꿨다. 법원체계는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급 3심제를 수립하는데 울산재판소는 이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으로 변경됐다. 지청은 1924년까지 총독부 건축재정으로 폐지되었고 등기소로 바뀐다.

울산 거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청부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신 1935년에 출장소가 들어선다. 1937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당시 울산출장소 취급건수가 연평균 4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해방이후 부산지방법원 울산등기소가 됐고 1970년대는 순회재판소가 열렸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울산의 인구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다.

1982년 옥동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됐다. 현재처럼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된 것은 1998년부터다.

■ 울산청년회관 - 울산사회단체회관

“더욱히 蔚山청년의 誠血(성혈)이 엉기어 結晶(결정)된 청년회관은 장엄하게 靑空(청공)이 높히 소사 市中을 감시하는 감이 잇슴은 이야말로 무엇보다 이상의 快味(결미)를 備嘗(비상)케한다.”²³⁾”



울산청년회관은 1920년 2월 울산청년회가 창립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울산지역 유지들과 청년회 관련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건설에 들어갔다. 1921년 11월 완공 후 낙성식을 가졌다. 이후 울산청년회와 울산청년연맹의 각종 강연회·강습회·토론회 등 계몽활동에 활용되었으며 또한 울산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었던 해영학원과 노동야학이 열렸던 사회교육, 민중교육의 장소를 겸했다.

1927년에는 신간회(新幹會)울산회를 발기하는데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결집한 항일단체에 걸맞게 울산에서도 각계각층에서 단체 통합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울산청년회관은 신간회울산지회 창립 장소로 창립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일제 경찰의 방해로 해를 넘겨 설립하게 된다.

1929년 6월 기존의 청년단체가 울산청년동맹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어도 역시 각종 창립대회 및 강연장·강습회·토론회장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사회운동의 중심지로 지역 사회에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1927년 11월 울산에서도 여러 사회단체의 중심인물들이 모여 신간회 울산지회의 설립에 착수하고 그 대회장으로 계획되었다가 일제의 불허로 늦춰지다가 1928년 3월 울산청년회관에서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1930년 10월 근우회 울산지회가 설립될 때에도 창립대회를 울산청년회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처럼 울산청년회 회관은 일제시기 울산지역의 민족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의 중심지였다.

23) 『개벽』 제38호 「蔚山漫草」 1923년 08월 01일



▲ 1929년 신간회울산지회 설립 1주년 기념행사 단체사진.

- 『매일신보』 1920년 2월 20일, 「청년회 발회식」.
- 『동아일보』 1921년 12월 9일, 「청년회관 낙성식」.
- 『동아일보』 1927년 11월 27일, 「신간울산회 발기」.
- 『동아일보』 1928년 3월 25일, 「울산지회 설립」.
- 『동아일보』 1929년 6월 5일, 「울산청맹 창립, 지난이일에」.
- 『동아일보』 1929년 11월 29일, 「울산청년회의 십주년기념식」.
- 『동아일보』 1930년 10월 21일, 「근우울산지회, 십육일에 설립」.
- 『동아일보』 1932년 10월 14일, 「울산노총 제4회 정기총회」.

현재의 건물은 1950년에 새로 지은 것을 다시 1971년에 대규모로 증 개축한 것이다. 그 때부터 건물 이름을 “삼일회관”이라고 불렀고, 울산향토문화연구회 등이 사용해왔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돼 버려진 건물이 됐고 최근에는 자전거 수리 및 판매를 하는 사회적기업 ‘거마’의 사업 공간 및 창고로 쓰이고 있다. 한편 삼일회관은 울산 중구 B-04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 사라질 위기다. 현재 계획된 조감도에 따르면 울산시립미술관이 들어서면 진입도로부지로 편입돼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이나 중구청 등 지자체가 나서서 울산 근대사와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최소한 독립운동공간이라는 표식이라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지는 국가 소유인데 건물은 사유 재산인 상태라 울산시가 아예 매입을 하고 기존 계획의 보강이 없다면 나아질 수 없는 형편이다.



■ 일본 정부 경제보복과 강제징용노동자

1. 울산에서 벌어진 강제동원, 강제징용으로 희생 당한 노동자

제국주의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후 일제강점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략을 위해 인적, 물적 동원 및 자금을 통제하고 강탈했다. 이를 강제동원이라 말하며 중일전쟁(1937년) 이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1938년 4월 1일)을 전면화 했다.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 모든 지배 지역의 사람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했다. 조선인 노동자 모집은 1923년부터 조선총독부가 통제했지만 중일전쟁을 도발한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며 조선총독부가 앞장서 지휘했다.

식민지 시대 국내외 강제동원 (단위 : 명)

유 형	구 분	인 원
노무 동원	한반도 내 동원	6,508,802
	해외 동원	1,045,962
	소계	7,554,764
군 관련 동원	군인 동원	209,279
	군무원 동원	63,312
	소계	272,591
총 합계		7,827,355

△국무총리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2012년 워크숍 자료집 244p

징용 형태는 초기에는 ‘모집’을 하다가 ‘관(官)알선’으로 바뀌었다. 전쟁 막바지 1944년부터는 전면적인 ‘강제징용’으로 변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이전에도 모두 강압적인 행정이 뒤따랐다. 모집의 예를 들면 총독부가 일본 기업에 조선인 노동자를 징용할 권한을 준다. 그러면 기업의 사원이 조선의 특정 지역을 찾아가 면사무소, 경찰을 동원해 징용 대상자를 모집했다.

만약 징용을 거부하면 면장, 호적계 면서기, 순사 등이 압박이 이어졌고 배급을 끊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심한 경우 현장에서 폭행이 가해졌고 징용을 피해 도망치면 연좌제를 통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관이 직접 알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니 강제성이 더 커진 것이다.

징용으로 끌려간 장소는 국내와 일본 그리고 사할린, 동남아, 남태평양군도 등이었다. 국내에서는 군사시설을 신설 보강하거나 군수물품을 제작하는 곳에 배치됐고 남쪽지방에서 멀리 만주근처 국경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국외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라 그나마 선호한 곳이었지만 위험

은 마찬가지로였다.

일본 본토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 약 40%가 탄광에 배치됐다. 조선인 탄광 근무자들은 부상에 시달리고 산재사고 사망이 뒤따랐다. 높은 사망률은 열악한 안전관리와 함께 미군의 공습이 한몫을 했다. 징용 지역 대부분이 군수, 방위산업체이므로 공습 대상이었다. 배고픔이나 구타만큼 무서운 것이 공습이었다.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의 탄광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원폭 피해를 입었다.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1만 명이 사망했고 2만 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다.

노동에 대한 급여는 있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서류상으로 월급, 가족수당, 개근수당, 잔업수당이 있어도 퇴직적립금, 국민저축 등의 공제를 해서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일제강점기강제지원희생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산하)에 따르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사할린, 중국, 타이완, 동남아시아, 중부, 서부 태평양 일대에 7,554,764명(중복 동원 포함)이상을 동원했으며, 중복을 감안해도 실제인원을 최소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한다.

1947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에서 작성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1934년부터 패전 직전까지 노무자 송출 등 조선인 징용자 숫자를 총 612만 6180명(당시 조선인 전체 인구의 20%)으로 추정한다.

2. 울산에서 강제징용을 당해 사할린 까지 갔던 경로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그 질로(*길로) 내(*계속해서) 그저 배타고 하관下關 가(*가서) 내려가지고, 시모노세키에 내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이제 이튿날 기차로 갔죠. 기차로 가가, 저 아오모리(靑森),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타고 하코다테(函館)로 갔죠. 내리기는 인자 그거 저 오도마리(大泊: 현재의 코르사코프)라고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니까는 뭐 저녁때로 이제 그래 저 나이부치(內淵)로 갔지요” 24)

- 농소읍 출생 김동선 선생님이 2006년에 증언한 내용



소련 여권과 한국 여권. 80년 소련국적을 취득한 후 영구 귀국 당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울산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김동선 어르신의 증언 구술을 보면 농소 마을에서 여섯 명 정도 울산군에서는 모두 40명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끌려가는 사람들의 팔뚝에 완장을 채웠는데 거기에 적힌 글씨는 ‘화태(사할린 일본지명)’. 하지만 누구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해외로 강제징용당한 노동자들은 보통 울산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간단한 신체검사와 교육을 받고 부산으로 출발했다. 당일에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서 북정동의 우편국에서 집으로 편지를 남기기도 하고 신사에 따라가 무사귀환을 기도하기도 했다. 울산읍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 원도심의 여관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학성동 울산역으로 이동해 기차를 탔다.

부산역 인근에 부산항이 바로 있어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항구로 가 시모노세키로 가는 부관연락선을 타고 떠났다. 그 뒤 일본 내륙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기차와 배를 번갈아 타며 사할린까지 간다.

김동선 어르신은 호계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하룻밤을 잤다고 한다. 기차를 타기 전 2년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정말 그런 줄만 알고 그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사할린. 1945년 초에 2년 기한이 다되었지만 '1년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찌할 수 없이 남게 되는 데 결국 조국은 해방이 됐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무국적자 신세가 됐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인은 그럴 수 없었다. 더구나 대한민국과 수교상태가 아닌 러시아에서 무국적자가 돼 버텨야 했다. 그나마 김동선 어르신은 해방 후 50년만인 1994년에 영주 귀국을 했다. 그러나 어르신과 달리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얼어붙은 검은 대륙 땅 속에 묻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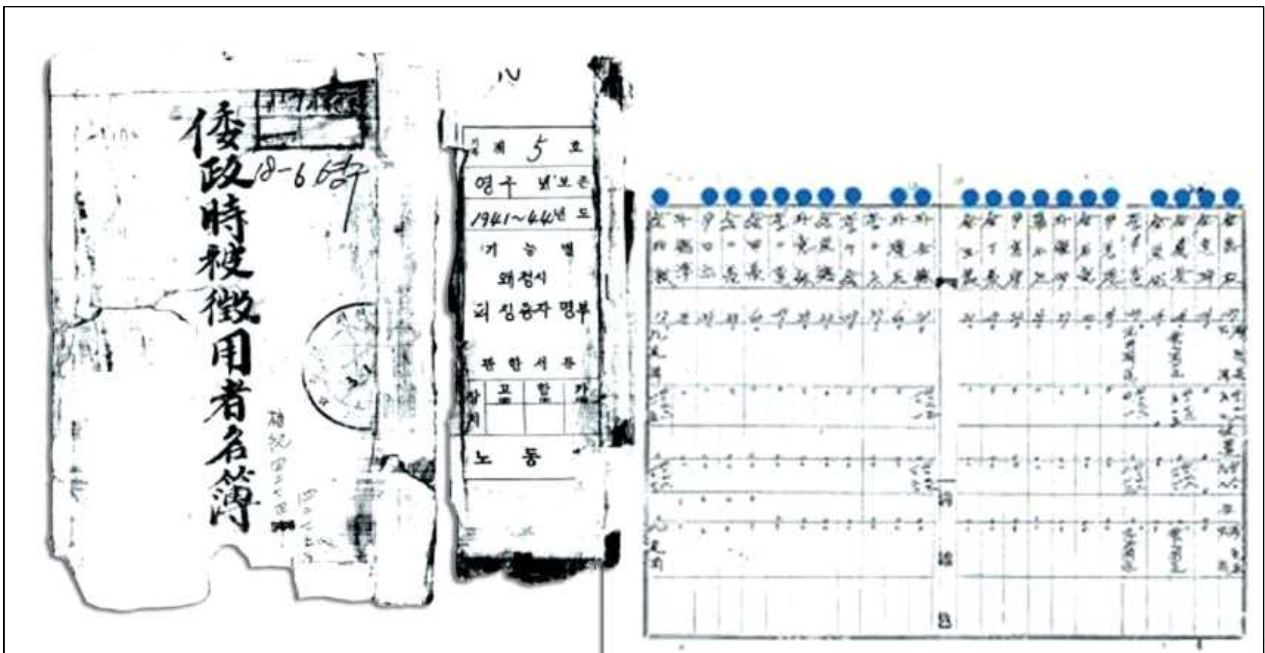
2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검은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울산 농소 출생 김동선 2006년 증언

3 강제징용 통계 속 일제강점기 울산 노동자

○ 국가기록원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검색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명부의 등재된 총 숫자가 최소 1,075,553명이며 그 중 울산 출생(본적)이 모두 6,313명(울주 32명 포함)이다.

그러나 이는 발견된 명부상의 숫자로 정부발표 통계의 약 30%로 이를 감안해 울산의 강제징용 희생자 숫자를 보정해보면 대략 1만 8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1957년~1958년에 걸쳐 우리 정부(노동청)는 <왜정시피징용자명부>를 작성했다. 일본과의 수교문제를 협의하며 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는데 피해자와 가족의 신고를 받아 각 시·도별로 만들었다. 총 인원은 231,594명이며 그중 울산 출신으로 등재된 숫자는 1,644명이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간자료 속 울산노동자

○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1-당꼬라고요?> 최차기(崔且起) 구술(345p). 고래포경회사에 성안동 마을사람 8명과 강제징용 돼 홋카이도에서 고래잡이 노동을 함.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에 묶여있다 사할린의 탄광으로 강제이주. 1989년 국내방문 후 2000년 영구 귀국

○ <1948년 한국으로 송환된 유골에 대한 진상조사>(2007)에 봉환된 명단 중 울산 출신 김학술 등재. (55p)

○ <사할린 이증징용 피해 진상조사>(2007). 안구문의 딸 안복순(1934년생) 증언. 아버지가 폭행으로 후유증에 시달렸고 가난으로 생활고. 귀국하지 않고 소련에 남음.

○ <강제동원 구술기록집11-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2009) 주인출 구술 중 울산, 김해, 함양에서 동원된 훈련생 사진.(328p) 일본제철 와니시 제철소 3기 훈련생.



○ <남양군도 지역 한인노무자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1939~1941)>(2009). “남양군도 동원 생존자 면담조사 완료현황” 표의 윤○형. 남태평양 라바울 섬의 비행장 및 도로 공사에 강제동원.(81p)

○ <강제동원구술기록집 2-검은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김동선 구술(55p). 1921년생으로 1943년에 농소면에서 마을사람 6명과 강제동원 돼 사할린 탄광에서 일함. 1994년에 영구 귀국.

○ <강제동원구술기록집10-굴 파러 군대 갔어!> 이종수 구술(225p). 1927년생으로 울주 상북면 출생. 1945년 4월 부산 제3부대 소재 부대에 입영 후 물자 하역작업과 진지 구축작업 노동. 군속(군무원)으로 동원. 해방 직후 고향으로 귀향.

○ <사할린 가미시스카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조사> (2007) 중 이종득 체험담(61p). 1918년생. 1941년 부산항 하역작업 중 경찰에 끌려가 일본 홋카이도를 거쳐 화태(사할린)로 강제동원. 비행장 공사와 탄광 노역.

○<훗카이도 히가시카와초 에오로시 발전소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2011) 중 울산 출신 최봉식 증언.(22p) 1926년 생. 1944년 강제동원. 발전소 노역 중 동상에 걸려 왼쪽 발가락 절단.(64p) 귀국후 왼쪽 무릅까지 절단. 박인식 조사. 1921년 생. 강동면 출생으로 1942년 강제동원 돼 삿포로에서 저수지공사와 에오로시 발전소와 수은광산 등에서 노역을 함.(87p) <에오로시발전소 피해신고 현황표>에 상북면 출신 송은봉 사망자 명단.(106p)

○ <전시체제기 규슈지역 아소광업(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2011). “『노무자 조사결과』 구바라 탄광의 동원지역과 동원시기” 표에 울산 출신 1명.(39p) “‘아소(麻生)’ 계열 작업장의 조선인 사망자 명부” 표에 울산 응촌 출신 박영수 1939년 사망.(83p) 응촌 검단 출신 이문동 1940년 사망.

○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2012)에朴○伊사례. 1929년 탄광에서 질식사 사망. 「火葬認許証及び変災報告書(長崎)」및 『原爆과 朝鮮人』 수록 명부

5. 국가유공자 독립운동 공훈록(보훈처) 중 강제징용과 관련된 울산 독립운동가

○ 김덕남(1919-1946). 공훈번호 6457. 농소면 출생. 1940년 일본 경도시(京都市) 하경구(下京區)의 철공소에서 근무 중, 일본인의 민족차별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의 옥고를 치름.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 김장룡(1926~2015) 1944년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경남 진해시(鎭海市)에서 하숙하며 항공창에서 근무.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킴, 한국인 공원들에게 일제 패망을 역설하고 태업(怠業)을 선동으로 옥고 겪음. 2007년에 건국포장을 수여.

○윤진옥(1926-1950) 1944년 울산비행장 확장공사와 부수 도로 건설공사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던 중 태업 주도. 동기들에게 일본군 지원 말 것을 권유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과 더불어 출옥. 2009년 대통령 표창.

○ 장채술(1916~미상) 1939년 화태(사할린)지방에 강제징용된 한국인의 처우개선과 반전(反戰)사상을 고취하는 운동을 전개. 1942년 「화태신문(樺太新聞)」에 조선징용 노무자의

대우에 관한 논문 발표, 1943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화태지방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6. 울산안의 강제징용 장소



2. 동굴 현황 - 4개소, 총연장 L=180m
※ 1~3동굴 연결시 L=283m (4동굴 이포함)

구분	연장	너비	높이
1동굴	60m	2.0 - 4.0m	2.0 - 2.5m
2동굴	42m	2.5 - 5.5m	2.0 - 3.0m
3동굴	62m	1.5 - 3.5m	1.8 - 4.2m
4동굴	16m	4.7m	3.0m




삼산동 울산비행장. 1928년 개장. 1937년 이후 일본 육군이 인수해 훈련기 연습장으로 사용.

태화강변 남산자락 군사용 동굴(현 남구 동굴피아) 1941년 태평양전쟁시기 군수물자 운반과 연료 공급기지



7. 일본 아베 정부가 보복에 나서게 만든 우리 대법원 판결은 무엇?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3년 만에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졌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논리로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뒤집었다. 한일기본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후 작년 말부터 일본 국내 정세와 동북아 정세를 살피며 겉으로는 반발하고 속으로는 보복 대응책을 준비해왔고 금번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전포고 하듯 일방적으로 터트린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경제적 타산을 따지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목소리는 아베와 자민당의 보복 정책에 보조를 맞춰왔다. 그러나 일본의 법조계를 대표해온 한 변호사가 이에 대한 아베 정부 입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눈길을 끈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은 국내 언론에 쓴 기고문²⁵⁾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정당성에 대해 설파한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

'日 경제보복' 정부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총 응답자 500명

REALMETER

여론조사기관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2천258명에게 접촉해 실시했으며,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25) 『한겨레』 :2019.7.22 전 일본변협회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폭거 아닌 상식”

■ 그리고... 민주항쟁, 1987년 6월 울산 원도심



형제교회

1982년에 만들어진 울산최초의 기독교장로회 교회였으며 민중신학의 목회를 했던 김영수 전도사가 초대 목사로 부임했다. 신도들은 주로 젊은 청년들이었으며 전두환 독재정권 때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둔 이들이 다수였다. 형제교회는 신앙공동체이면서 울산의 사회공동체 역할을 지향해 시민운동, 민중운동에 참여한 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교회 안에서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졌고 대학생이나 청년노동자들이 구별없이 교류하는 장이었다. 1986년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가했고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울산NCC인권위원회, 울산EYC(기독교청년협의회)

1970년대 후반부터 개신교 속에서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에 앞장섰으며, 특히 민중과 함께 하는 실천적 삶을 지향한 협의체가 엔씨씨(NCC 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였다. 그리고 청년은 별도로 이와이씨(EYC 기독교청년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울산 이와이씨는 6개 기장, 예장통합, 구세군, 성공회, 감리교 다섯 개 교단으로 창립했다. 형제교회, 양정교회, 대현교회, 대흥교회, 제일교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 1983년 광주민주항쟁을 추모하는 집회를 울산에서 처음 열었다. 1986년 울산성당과 카톨릭농민회 등이 더해져 신·구교가 모두 모인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로 확장됐다.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1986년 9월 15일 대한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울산지역의 천주교, 기독교, 성공회 등 신·구교의 진보적인 이들이 중심이 된 협의체로 울산성당 손덕만(토마)와 대한교회 윤응오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울산의 사회선교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의 기틀을 만들었다. 창립부터 민중운동, 민주운동, 민족통일운동을 기치로 세웠으며 부설기관으로 노동문제상담소를 두었다. 각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농촌, 공해·주민, 문화·홍보, 여성, 청년·학생위원회 활동도 진행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으며, 7~9월 노동자대투쟁에 적극 결합해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이런 활동때문에 공간기관으로부터 일상적인 감시를 받았고 압수 수색과 주요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됐다.

울산성당(현 복산성당)

울산성당은 서울의 명동성당과 같이 울산의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다. 1956년부터 카톨릭 부산교구 소속 울산의 모 성당 역할을 했다. 손덕만(토마) 주임신부의 부임 후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1986)와 울산국민운동본부(1987)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1987년 1월 26일 울산에서 '박종철 추모 및 고문폭력 범시민규탄대회'가 열린 곳도 울산성당이였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기간 중 시작점 또는 집결지의 역할을 했다. 노동자대투쟁 때는 노동관련 초청강연회 장소로 사용됐다. 그리고 2001년 울산화섬3사파업 중 공권력 투입으로 현장에서 쫓겨난 효성노조 조합원의 피난공간이 됐다. 울산성당은 1998년 복산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7년 지금의 건물로 새로 만들어졌다.



옛 주리원백화점과 시계탑사거리

울산의 6월 항쟁 중심거리. 원도심의 변화가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1987년 민주항쟁 때는 거리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최루탄과 몽둥이를 든 전투경찰과 백골단 등 사복체포조를 피해 주리원백화점 앞 골목에서 대기했던 시민들의 기습적시위가 반복했다.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성당(현 복산성당)으로 이어지는 중앙시장 앞 거리는 주요 행진 경로이자 거리 집회장소가 됐

다. 첫 거리시위는 3월 3일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고문추방! 민족민주화! 평화의 대행진'. 5월 18일은 '호헌반대 및 민주헌법쟁취 범시민운동 울산본부'(이후 울산국본)가 울산성당에서 주최한 5.18 추모대회후 거리진출을 시도했다. 6월 9일 이한열의 피격 소식에 추모대회, 6월 10일에 1차 민주헌법쟁취 범시민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6월 18일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제2차 출정대회를 선포 했다. 다음날 19일 울산성당에서 '살인죄루탄 추방 및 민주헌법쟁취 범시민 결의대회' 열고 거리로 나선 시위대가 처음으로 주리원백화점 앞 경찰을 밀어냈다. 그뒤 거리시위와 행진은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평화의 대행진'까지 계속됐고, 원도심 뿐 아니라 태화강 둔치와 울산교를 건너 신정시장앞과 울산시청까지 진출했다.

울산경찰서(현 울산미술관예정지)

원도심의 북정동에 위치했던 울산경찰서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들을 감시 체포 고문한 가장 악질적인 탄압의 공간이었다. 1945년 해방되던 날 만세행렬이 가장 먼저 달려가 습격한 곳이기도 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후 8월~10월, 보도연맹 희생자들이 학살 직전까지 강제수감했던 곳이다.

1987년 민주항쟁 때도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앞세워 거리의 시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잡혀갔던 곳이다. 그러나 6월 10일 이후 부터는 항쟁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역전됐고 6월 17일에는 공권력에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울산경찰서를 둘러싸고 점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현대엔진노조 창립장소(라이브디스코클럽)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6.29선언을 이루어낸 직후 노동자대투쟁이 울산에서 시작됐다. 그 시작점이 옥교동의 라이브디스코클럽에서 7월 5일 열린 현대엔진공업노조의 창립총회다. 사내모임 '고적답사회' 이름으로 장소를 임대 후 비밀리에 100명이 모였다. 현대엔진노동자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여러 소모임으로 뭉쳐왔고 1987년 1월 성과급 차등지급을 반대하는 500여명의 몸벽보시위와 4월 노사협의회가 임금인상투쟁을 진행했다. 그런 투쟁속에 노동조합의 준비한 결과 6월 항쟁이 끝난 직후 미루지 않고 출범할 수 있었다. 당시 노동조합이 전무했던 현대그룹의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소식은 다음날 보고대회와 홍보물 배포로 인근 사업장에 전해졌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울산 전역의 민주노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9월까지 전국적인 노동자대투쟁으로 번져갔다.

울산민족학교

민족학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와 시민 교육의 절실함으로 만들었다. 울산지역 사회교육사업의 장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고 1988년 7월에 1기 수강생을 모아 시작했다. 교육 분야는 민주, 교육, 정치, 통일, 노동, 경제, 역사, 문화 등이었으며 당대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민족학교의 활동과 성장에 1989년 8월,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등 탄압도 벌어졌다. 최종 6기까지 배출했으며 기수별 소식지와, 동문회보 <민학이>를 발간하고 후속 동문모임으로 이어졌다. 울산 민족학교 졸업생들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중요한 활동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울산지역의 노동자 교육과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의 마중물이 됐다.

